

문무일 “수사권 경찰 넘기면 부작용”

국회 사법개혁특위 출석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자격 놓고 여야 충돌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관한 불복 절차 등 민감한 주제가 다뤄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자격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등 공방도 벌어졌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진 전 국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두고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검찰수장까지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문 총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영장기각에)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절차가 마련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영장 기각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경찰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다시 다툼 기회를 주지만,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검찰이 경찰을



국회 온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질의 중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정회되자 회의를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려면 ‘사찰’로 왜곡될 수 있는 경찰의 정보 기능을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경찰의 정보기능이 확장된다 보니 (범죄정보뿐 아니라) 동향 정보나 정책정보로 확장됐다”며 “(이)는 사찰정보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보 및 수사 기능을 분리한)

자지경찰제 문제가 수행되지 않고서 수사권이 (곧바로) 경찰로 넘어가면 국가적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경찰의 권한에 수사권만 일방적으로 얹어주면 경찰 권력이 자칫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자격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등 공방도 잇따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선거 분위기 띄워야 하는데...” 고민 깊은 민주

잇단 성폭력 의혹에 어수선... 선거본부 출범 일정도 못잡아

6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3개월 앞두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의 직격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선거 분위기를 띄워도 모자랄 판에 잇단 성폭력·성추행 의혹이 터지면서 당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분위기도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경쟁은 물론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당내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각종 루머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당내에선 먼저 민주당 복당 선언과 함께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 중인 정봉주

전 의원과 충남지사 출마 입장을 밝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는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불륜 의혹 등이 제기된 박 전 대변인에게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권고했으나 박 전 대변인은 “정치공학·핵심선전”이라고 반발하면서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또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정 전 의원은 오는 15일 복당 심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피해자 보호주의 및 불관

용, 근본적 해결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두 사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상황 정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일), 정봉주 전 의원(7일), 민병두 의원(10일)을 겨냥한 연이은 미투 폭로와 그에 따른 파문이 계속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체제 전환의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공관위 구성 등은 물론 지방선거대책본부 출범 일정도 미정인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는 선거본부를 띄워야 할 시점인데 당도 어수선한 데다 지금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면 국민에게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강기정, 광주광역시경제권 완성 8대 플랜 제안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광주·전남공약 설계자로서 500만 광주광역시경제권 완성에 나서겠다”며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500만 광주광역시경제권 구상은 광주, 전남·북을 아우르는 자립경제권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8대 플랜을 제안했다.

광주무안 통합공항을 호남 관문공항으로 조성, 10만 스마트 시티 건설, 글로벌에너지전력엑스포 개최, 경제신산업육성벨트 구축,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역벨트 조성, 광역교통정 설치 등이 주요정책이다.

민형배 “문화부시장 임명해 문화도시 확립”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3일 문화예술정책을 내놨다.

민형배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 내고 “문화부시장을 임명해 체계적인 문화계획 행정을 추진하는 ‘광주공화국’을 만들겠다”면서 “경제와 일자리는 시장이 직접 챙기고, 대한민국 최초 ‘문화부시장’을 임명해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분명하게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전당장도 뽑지 못한 채 갈지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립이라지만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개입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좀 더 명확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호,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공약



더불어민주당 최영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3일 광주의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 무상교복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 후보는 이날 “광주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무상교복 지원”을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남구청 재직 시절, 교복나눔 행사를 했지만 아쉬움이 많았다”며 “이미 경기도 성남시, 광명시, 수원시 등에서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광주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가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매년 교복 무상지원이 가능하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미래 광주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성수 “軍, 훗날 무력진압 시도 진상 규명을”



이성수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3일 “훗날혁명을 총칼로 무력 진압하려 한 박근혜 정부 친위 군부쿠데타 음모자들을 색출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훗날혁명 시기 군부쿠데타 모의 세력이 훗날 집회를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훗날을 든 국민은 쿠데타 세력의 총칼에 학살되는 제2의 광주학살 비극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송갑석 “남·북·북·미 회담 성공 힘 모아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선거(광주시구 갑)에 출마한 송갑석 예비후보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력 결집’ 방침에 대해 지지 논평을 냈다.

송 후보는 이날 “대통령이 2번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염원하는 간절함이 담긴 호소이자 절규”라며 “온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국에 특사를 파견해 외부로부터의 지지와 국민적 지지를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해 뒤 “대통령이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의 구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임택 동구청장 후보 등록...본격 선거운동



광주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임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시의원을 사퇴한 뒤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임 의원은 13일 “변화의 시작 선택 임택”이란 가치를 내세우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동

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동구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형 일자리 창출 정책’ ‘공동체 복지안전망 정책’ 등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김병내 “8년간 남구 살림살이 크게 나아져”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3일 “지난 8년간 민선 5·6기 남구청장으로 큰 업적을 이뤘다”면서 이날 퇴임한 최영호 남구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 정장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함께 일했던 김 예비후보는 “현안마다 연구하고, 치열하게 준비하면서 강한 추진력으로 일을 처리했던 모습이 생생하다”면서 “지난 8년간 최 정장이 이끈 남구는 108억원에 달했던 부채 규모가 8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3200억 원이었던 공유재산도 5000억원으로 늘는 등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민선 7기 남구도 그 성과가 디딤돌이 되어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출 “남구, 일자리 창출·에너지 메카 조성”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성현출 예비후보는 13일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교육장에 찾아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눴다.

성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구청의 핵심조직으로 ‘일자리전략추진단’을 만들어 구정 운영체계를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산업, 실버산업, 문화관광산업을 비롯 대촌동 에너지밸리 전용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 메카 남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여성일자리, 물론 노인, 장애인 등 취약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욱·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연수원/요양(병)원 변경가능
- 대572평, 건683평, 객58, 4층건물
-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 전체리모델링(5억), 관광온천지구
- 매18억(대출8억포함, 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광주에서 40분
- 대지106평, 건물42평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시세 - 1억 1000만원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매매 - 8200만원
- 문의. 010-3605-5000